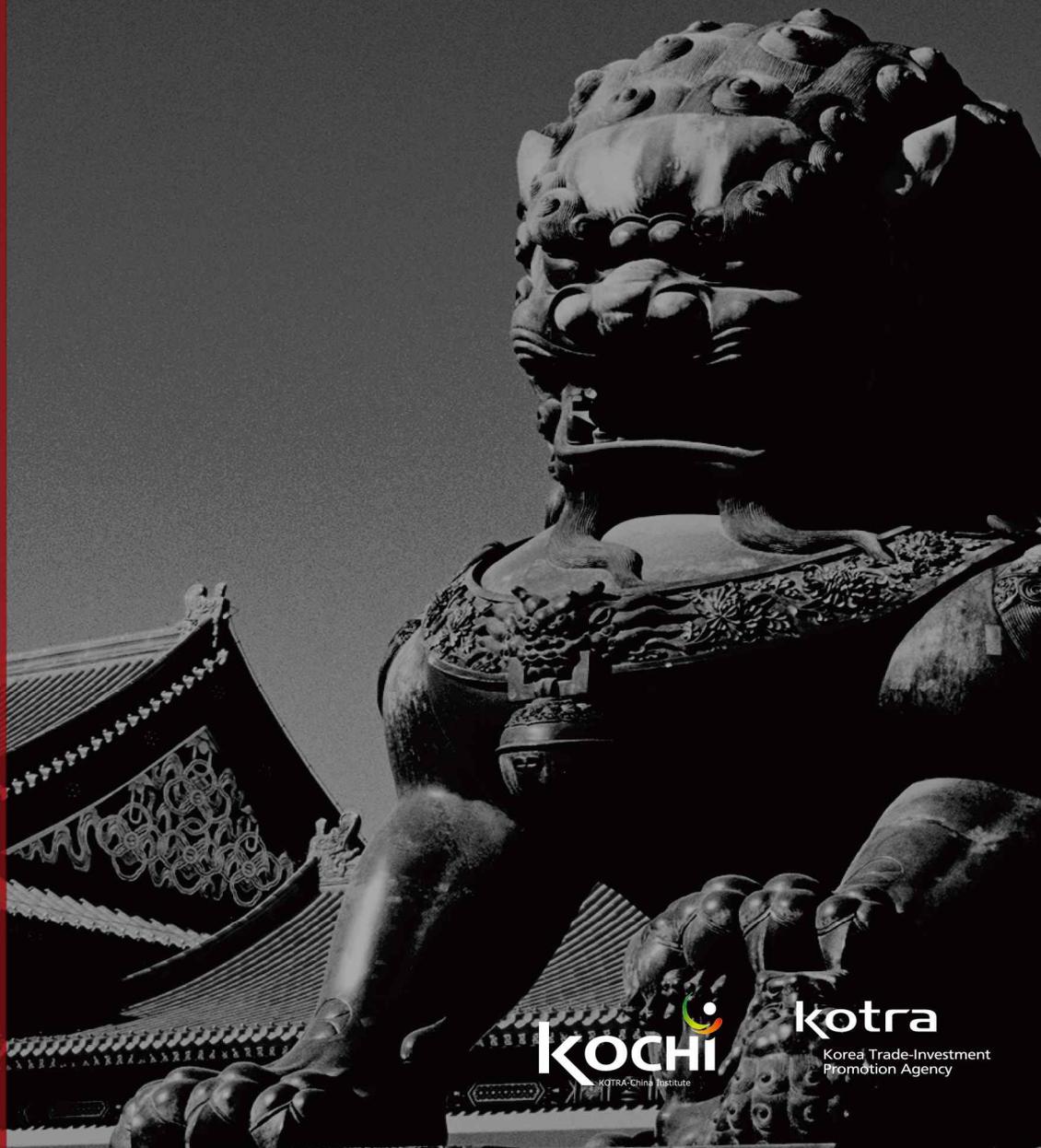


CHINA

KOCHI자료18-003



양회에 나타난 중국의 2018년 경제정책과 시사점



KOCHI
KOTRA China Institut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I. 2018년 양회 개요

- 1. 양회란?
- 2. 주요 결정

II. 분야별 경제정책

- 1. 경제운용(거시경제) 및 정책과제
- 2. 성장동력 발굴
- 3. 경제개혁
- 4. 지역개발
- 5. 대외경제

III. 기회와 활용 방안

- 1. 2018년 주목해야 할 7대 시장 변화
- 2. 한중 현안 시사점
- 3. 대응 방안

[요 약]

1. 양회(전인대)* 에 나타난 2018년 경제정책

* 양회(兩會) : 3월초 같은 기간에 열리는 중국의 2대 정치일정(정치협상회의(政協)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가리키며, 이중 전인대를 통해 정부정책 공식 결정

□ (기본방향) 2018년 중국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안정적 고성장’, 신성장 동력 확충, 성장의 질 제고로 요약되며 5개 과제로 요약

○ 거시경제 목표와 함께 정부정책 과제로 9가지*를 제시

* ①공급측 개혁, ②혁신 강화, ③경제개혁, ④3대 중점과제(공격전), ⑤농촌진흥, ⑥지역개발, ⑦소비확대 및 투자 촉진, ⑧개방 확대, ⑨민생 개선. 리커창, <정부사업보고>(3.5). 주무부서인 발개위는 ‘생태문명 건설’을 더해 10가지를 제시

(1) 경제운용(거시경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안정적 중고속 성장(6.5% 좌우)’ 지속, 적극 재정·온건 통화 정책,* 국제수지 균형이 기본 방향

* 재정지출 확대하되 통화공급 억제하여 성장율보다는 안정적 경제운용 도모

○ 고속성장 → 질적발전 전환에 부합하되, 취업을 유지 위한 적정 성장율로 6.5%를 제시(리커창 총리)

○ 분야별로는 물가상승률 3% 좌우, 도시 신규취업 1,100만 이상*, 도시 등기실업률 4.5% 이내 억제, 수출입 온건 개선, 국제수지 균형 등

* 작년 목표와 같은 수준으로 실제로는 초과달성(1,351만명)하여 강한 자신감 피력

(2) (성장동력 발굴) 신성장 분야 육성과 구조 조정 통한 성장의 질(質) 제고

○ 신성장(신흥)산업 육성 및 전통산업의 첨단화·스마트화 추진

* ‘인터넷 플러스(+)’, ‘지능 플러스(+)’ 통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등 첨단화·정보화 추진

○ “대중창업·만중창신(大衆創業·萬衆創新)” 통해 혁신형 창업 추진
- 이를 위해 혁신·창업 시범기지 건설,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발전 지원

(3) (경제개혁) 소유권, 금융, 재정·세수 분야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 보다는 보완과 개선에 치중

○ 국유자산 관리 및 국유기업 경영 개선, 민영기업 발전, 재정 및 세수체제 개선, 금융 개혁 등 추진

(4) (지역개발 및 신형도시화) 균형발전 지향하되 새로운 성장지역과 성장 벨트, 지역별 특성을 지닌 도시군(群) 육성 정책 추진

-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공동발전 · 창장(長江)경제벨트,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 등 지역 특화형 지역발전정책 추진 강화
- (도시화·농촌진흥) 지역별 도시군 육성을 포함한 신형도시화*, 농촌진흥* 추진
 - * 농민의 시민화(市民化) 1,300만명 달성, 도시인프라(시장, 주차장등), ‘도시속 농촌(城中村)’·구(舊)주거지 개선 등
 - ** 농업 공급측 개혁, 즉 현대적 농업산업원, 지방 특화형 농산품 생산, 고표준 농경지 확대 등

(5) (대외경제) 대외개방 확대, 국제협력 및 영향력 강화 지속 추진

- (일대일로) 통관협력, 생산 협력, 중국기업 해외진출, 내륙개방 등 대외협력 지속 추진
- (투자 개방) 투자 개방* 확대, 절차 간소화, 내국민대우 확대 지속 추진 재확인
 - * 일반 제조업 전면 개방, 전신·의료·교육·양로·신에너지자동차 개방 확대 등
- (무역 개방 및 편리화) 무역 개방 및 질 제고, 편리화 더욱 적극 추진
 - 통관시간 단축 등 통관 편리화 추진
 - 서비스무역 발전 및 신무역(전자상거래 등) 육성
 - 가공무역(가공생산)의 중서부 지역 이전*
 - * 2010년 이후 중국은 가공무역 제한(우대 철폐) 정책을 종료하고 가공무역을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중
 - 수입 확대* 및 수입관세 인하 추진
 - * 11월 5~10일, 상하이 ‘IMPORT EXPO’ 개최 추진

※ 특히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4월 10일)에서 적극적인 개방 확대* 방침을 강조

- * 금융·자동차등 투자제한 대폭 완화, 중국내 투자환경 개선, 지재권 보호,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등 수입 확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가속화 등
- (통상협력 강화) 자유무역 옹호 및 보호주의 반대, 자유무역 협상 적극 추진 등 개방경제 주도 및 국제경제적 영향력 확대 의지 강력 피력

2. 2018년 중국의 유망 산업·시장

- 최근 중국의 산업 및 시장 변화 동향과 올해 양회에 나타난 정부정책을 볼 때, 대략 7가지 산업과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

7대 시장	업종/내용
① 신성장산업	빅데이터, 차세대 인공지능(AI) 육성 ;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등 인터넷 활용(+) 추진
② 스마트제조	집적회로·5세대 이동통신·항공기 엔진·신에너지자동차·신소재 등
③ 현대적 서비스업	전문서비스(법률, 회계, 세무,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혁신형 생활서비스(인터넷·빅데이터·AI 기반 생활서비스(교육, 환경, 관광, 의료 등))
④ 창업	모든 혁신형 창업(차세대 기술(인터넷·빅데이터·AI 등 네트워크 기반 창업))
⑤ 소비 확대	고급소비재((신에너지)자동차, 가정용품, 식품 등), 생활서비스(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여행 등)
⑥ 투자	일반 제조업, 철도, 도로, 수운(수운), 수리, 가스, 전신, 의료, 교육, 양로 등
⑦ 지역특화형 도시권	건축, 건설, 교통인프라, 도시인프라(시장, 주차장·하수도·환경설비 등), 지역특화형 관광

3. 중국 진출 및 한중 협력 방안

- (시장 진출) 중국 경제(산업, 시장)의 최근 성과와 정책 방향으로 보아 중국 시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중국 시장 진출과 활용 전략 모색
 - (산업) 중국의 ‘신산업’ 을 신시장으로 삼아 진출 전략 적극 모색
 - (시장) 신산업의 전방(前方) 산업은 물론 고품질 소비재, 서비스, 더 나가 창업시장을 겨냥한 업종 및 제품 개발과 진출
- (한중 협력) 양국의 정책 점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 (정책 협력) 일대일로 - 신북방협력·신남방협력·한반도 신경계지도 등 양국 핵심 정책의 접점을 찾아 협력 방식과 대상을 발굴, 추진
 - (분야별 협력) 산업, 이슈, 지방간 협력 강화와 모델 발굴
 - △4차산업(‘신성장산업’), ‘스마트 제조’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기술 개발, 창업 모색, △비관세장벽(통관·인증·표준 등), 중소기업, 금융 분야 협력 강화, △지방협력 추진 등
 - (통상 협상) 한중 FTA 이행 및 후속협상, 기타 통상 협상에서 공조 강화

[본 문]

I. 2018년 양회 개요

1. 양회란?

□ (정의) 중국의 연간 최대 정치일정으로 매년 3월 초중순 개최되는 2개의 정치행사*로, 중국의 한해 정책이 공식 결정되는 자리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

<양회 개요>

양회 (兩會)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약칭 : 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당과 정당·분야 대표로 구성된 ‘통일전선’ 기구 ○ (기능) 정치와 정책에 대한 감독, 건의 ○ (지도부) 주석은 왕양(汪洋, 공산당 서열 4위), 정협위원은 추천을 통해 임명(13기 위원 2,158명)
	전국인민 대표대회 (약칭 : 전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권력기관으로 국회와 비슷하나 권한과 범위 더 넓음 - 지도부 인선, 정부정책 전인대 의결 통해 최종 확정 ○ (기능) 정부 조직 및 지도부 인선, 정책을 결정 ○ (지도부) 의장은 리잔수(栗戰書, 공산당 서열 3위), 대표는 선거로 선출(13기 대표 2,980명)

○ (일정) 3월 초중순 17일간(3일~20일) 진행

- 정협 3~16일, 전인대 5~20일

<2018년 중국 양회 일정>

날짜	일정	주요 내용
2018.3.3	정협 13기 1차 회의 개막	13일간(~16일) 각 분야 현안 토론 및 정책 건의
3.5	전인대 13기 1차 회의 개막	정부사업보고, 예산보고, 헌법수정안 설명
3.11	전인대 3차 전체회의	헌법수정안 표결
3.13	전인대 4차 전체회의	감찰법 초안 청취, 국무원 기구개혁안 청취
3.16	정협 폐막	
3.17~19	전인대 5, 6, 7차 전체회의	지도부 선출, 헌법 개정
3.20	전인대 8차 전체회의, 폐막	정부사업보고·감찰법 표결, 의장 연설

2. 주요 결과

□ (올해의 특징) 시진핑 주식 집권 2기* 첫번째 양회로 헌법 수정을 비롯한 대대적인 정부기구 개편 및 지도부 인선이 이루어짐.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 지난해 말(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2기 집권 공식화

① <2018년 정부사업보고(政府工作報告)> 청취, 심의 및 공포
- 핵심 일정으로 3월 5일 전인대 개막 직후 리커창 총리 발표

② 헌법 수정안 통과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헌법 명기

- 국가주석과 부주석 2기수* 이상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등

* 1기수는 5년이며 올해 시진핑 2번째 국가주석 시작. 시진핑 주식의 장기집권이 가능해 짐

③ 국가기구 주요 지도자 인선 : 19차 당대회에서 연령제한에 걸려 당 직위에서 물러난 측근 왕치산(王岐山) 당규율심사위원장의 국가부주석직 복귀를 비롯 시진핑 친정체제 강화

-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 복귀, 리커창 국무원 총리(당서열 2위) 연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당 서열 3위) 선출

- 부총리 4명 선출(한정(韓正), 순춘란(孫春蘭), 후춘화(胡春華), 류허(劉鶴))

* (부총리 역할분담) △ 한정 : 발전과 개혁, 재정, △ 순춘란 : 위생, 건강, 체육, 교육, △ 후춘화 : 삼농(농업·농민·농촌), 빈민구제, △ 류허 : 상무, 금융, 과학기술 등

- 왕이(王毅)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 선출

- 최고인민법원 원장 선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선출 등

④ 국가감찰법 통과 및 국가감찰위원회 구성(주임 : 양샤오두)

⑤ 국무원 기구 개편안 통과

- 장관급 기구 8개 축소, 차관급 기구 7개 축소 등

II. 분야별 경제정책

1. 경제운용(거시경제) 및 정책과제

1) 지난해 평가

□ 2017년 목표 완수는 물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데 자신감을 피력하며, 기존 정책 지속 추진 의지를 표명

○ GDP 6.9% 증가(당초 목표 6.5%), 주민소득 7.3% 증가 등 전년에 비해 신속 증가

○ 도시신규취업 1,351만명(당초 목표 1,100만명), 실업율 수년간 최저 수준 달성

- 리커창 총리를 비롯 주요 지도부는 특히 낮은 실업율과 높은 신규 취업 증가에 만족을 표하며 큰 의미를 부여

* “지난 5년간 도시 신규취업이 6,600만 명을 넘어섰는데, 13억 인구의 대국이 충분한 취업을 이루어 냈다”(리커창, <2018년 정부사업보고> 모두 발언(3.5)>

* “‘대중창업·만중혁신’에 힘입어 지난 5년 사이에 일일 평균 신설기업이 5천여개에서 1만 6천여개로 늘어났다”(동 모두 발언)

○ 기업이윤 21%, 재정수입 증가율 7.4%로 안정적 신속 증가세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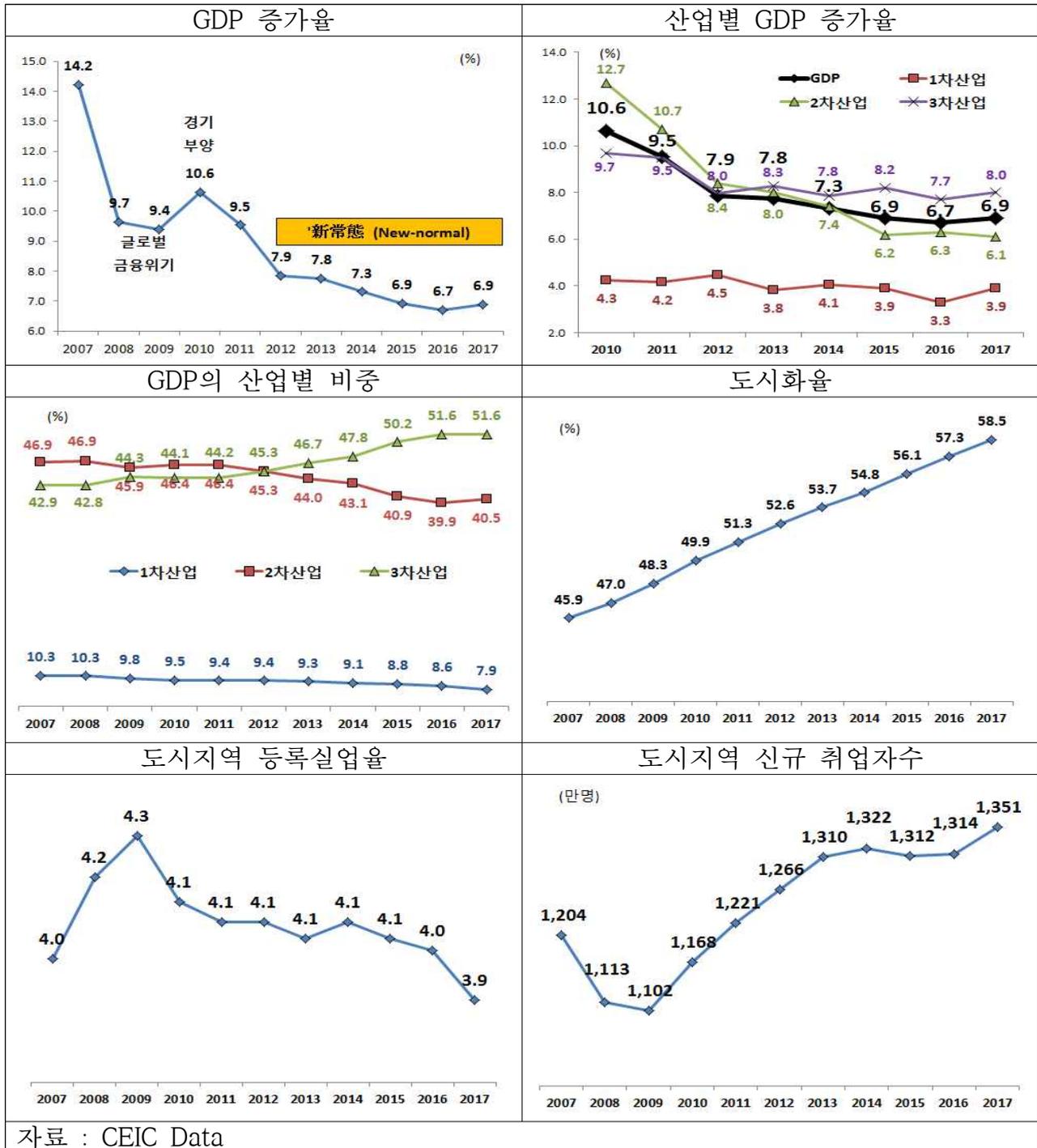
○ 수출입증가율 14.2%, FDI 도입 1,363억 달러 역사적 고성장 달성

□ 특히 안정적 중고속 성장 성장, 낮은 실업율, 높은 취업 실적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 지도부는 강력한 리더쉽과 능동적 대내외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참고] 참조)

☞ [참고] 주요 지표로 보는 최근의 경제·사회 성과

- (성장율) 양호한 실적, 특히 서비스업이 주도
 - 산업구조, 서비스업(3차산업)이 주력 산업('17년 51.6%)
- 신속한 도시화, 5년 사이 5.9% 높아져(52.6 →58.5%)
- 낮은 실업율('17년 3.9%), 높은 취업 실적('17년 1,350만명)



2) 2018년 계획

□ (거시경제 운용) 안정적 중고속 성장(6.5%) 지속, 적극 재정·온건 통화 정책,* 국제수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

* 재정 지출을 확대 하되, 통화 공급을 억제하여 성장을 보다는 안정과 구조 조정에 노력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

○ GDP 성장률 6.5% 좌우를 비롯, 작년과 비슷한 거시목표 제시

○ (근거) 고속성장단계 → 질적 발전단계 전환에 부합하되, 취업을 유지할 위한 적정 성장율로 6.5%를 제시

- 물가상승률 3% 좌우, 도시 신규취업 1,100만 이상, 도시 등기실업률 4.5% 이내, 수출입 온건 개선, 국제수지 균형 등

<2018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

지 표	'18년 목표	'17년 목표 및 실적	
		실적	목표
GDP증가율	6.5% 내외	6.9%	6.5% 내외 - 초과달성 가능
물가상승률	3% 내외		3% 내외
도시등기실업율	4.5이내 (조사실업율 5.5% 이내*)	수년내 최저	4.5%이내
도시신규고용 (만명)	1,100만명 이상	1,351	1,100
수출입	안정 성장, 수지 균형	14.2%	회복·안정 및 호전, 수지 균형
재정적자율	2.6% - 전년비 0.4% ↓		3%

* (조사실업율) 도시내 농민공 상주 현실을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목표치에 추가 하여 동반성장을 강조

* 자료 : <정부사업보고>, 2017년, 2018년

□ (9대 정책과제) 6.5%의 안정적 성장정책 방침하에 9대 정책과제를 제시

① (공급측 개혁*) 가장 중시되는 정책 과제로서 신성장 동력 확충 및 제고와 비효율 기업 퇴출등을 지속, 강화를 명시

*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 경제성장의 3대 축인 투자, 소비, 수출 등 ‘수요측’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공급의 수요에 대한 적응성과 유연성, 그리고 공급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 공급구조 조정(과잉생산 억제), 품질 제고 등을 주목하며 구체적으로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과잉생산설비 해소(去産能), 부동산 재고 해소(去庫存), 레버리지율 감소(去虹杆), 원가절감(降成本), 유효공급 확대(補短板) 등을 강조

② (경제혁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시스템 구축 및 창업 육성을 강조
- 기초연구·국가 프로젝트 추진, 혁신 장려정책, 특히 ‘대중창업·만중혁신’ (大衆創業·萬衆創新)을 각별히 강조

③ (경제개혁) 국유 자산 및 국유 기업 개혁과 민영기업 발전, 재산권 제도와 요소시장의 시장화 배치, 재정세수체제, 금융체제 등 추진
- 소유제 개혁, 전면적 시장화(정부의 경제개입 획기적 축소) 등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전환 보다는 기존 공유제 중심의 정부 주도 경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 보완을 시도

④ (3대 중점과제(攻坚战*)) 특별 집중 관리 과제로 △리스크 예방, △빈곤 구제, △오염 예방 등을 제시

* 견고한 진지와 무기를 갖춘 적을 상대로 많은 피해를 무릅쓰고 벌이는 공격 전투, 즉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공격 전투를 의미

⑤ (농촌진흥) 취약 및 전략적 관리 분야로 △농업분야 공급측 개혁 (농업 현대화 및 전문화, 인터넷 기반 농업 등), △농촌개혁(토지 임대체제, 용지보호, 곡물 수매 개선등), △농촌지역 인프라(관개, 전기, 정보, 도로, 주거 등) 등 사업

⑥ (지역개발) 지역별 특성화(特性化) 발전 지향의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

* 중국에서는 대체로 지역균형 정책(예) 개혁 초기 연해지역 중심의 선부론)과 지역경사발전(일부 우선발전 정책)(예) 개혁개방 이전시기의 3선건설 정책, 후진타오 집권시기의 서부대개발 정책 등)이 교차되어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성화 전략이란 각자 처한 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전략을 의미

- 혁명근거지 · 소수민족 · 변경지역 지원
- △징진지 협동발전(베이징 비(非)수도기능 이전, 숭안(崇安)신구 건설), △창장경제벨트, △홍콩-광둥-마카오 대만구(大灣區), △서부대개발 · 동북진흥 · 중부굴기 · 동부 솔선 등 특성화 발전 추진
- 신형도시화* 지속 추진 강조(농민의 시민화, 도시인프라 확충, “도시속 농촌(城中村)” 등

* 신형도시화(新型城市化) : 도시화를 추진하되 과거 후발산업화 국가에서 나타난 농촌 해체 → 급속 도시화에 따른 빈부격차와 ‘도시병’ 등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인간의 얼굴을 한’ 도시화를 지칭. 2013년 공식 제기

⑦ (내수 확대) 내수 기반 성장을 위한 소비 및 투자 확대 조치

- (소비) 소비기반 성장(세컨드카, 의료 · 양로 · 교육 · 문화 · 여행 등
- (투자) 철도, 도로, 수리, 주요 인프라 투자 확대 등

⑧ (대외개방) 대외 개방 확대 및 무역 고도화 · 편리화(便利化), 통상 강화 등 강조(상세 내용 뒤의 5절 참조)

⑨ (민생 개선) 취업, 창업, 소득 증대, 교육, 건강 등 지속성장 기반 강화 차원에서 강조

〈2018년 9대 정책과제〉

정책과제	내 용
①공급측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신흥산업, ‘인터넷 플러스’ * · 스마트제조 기반 확대 * ‘인터넷 플러스’에서 더 나가 ‘지능 플러스(+)’ 방침도 제기 ○ (제조강국) 집적회로, 5세대이동통신, 항공엔진, 신에너지차, 신소재 등 ○ (비효율 공급 제거) 과잉·도대기업 퇴출, 철강·화력발전·좀비기업 퇴출 ○ 기타 시장진입 장벽 완화, 기업부담 경감 등
②혁신 강화	혁신시스템 강화, 혁신동기 개선, 창업 육성
③경제개혁	국유자산·국유기업 개혁, 민영기업 발전, 재산권 제도·요소시장화 개선, 재정세수 개혁, 금융 개혁, 생태 개선
④3대 중점과제 (攻堅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예방) 금융리스크, 금융사기, 금융 부채, 지방 부채 관리 ○ (빈곤구제) 농촌 빈곤층, 빈곤 취약층 지원 강화 ○ (오염예방) 청정공기 확대, 화학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 관리 등 * 공견전(攻堅戰) : 견고한 적을 상대로 치르는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전투
⑤농촌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공급측 개혁) 현대적·특성화 농업, 고품준 농지, 인터넷 농업 ○ (농촌개혁 심화) 토지임대권 안정, 용지 보호, 수매·저장 개선 ○ (각종 농촌 사업) 관개, 전기, 정보 인프라, 도로, 주거 개선
⑥지역개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 구조 재편) 혁명근거지·소수민족·변경지역 지원, 장진지 협동발전(베이징 비수도기능 이전, 숭안신구 건설), 창장경제벨트, 홍콩-광둥-마카오 대만구(大灣區), 서부대개발·동북진흥·중부굴기·동부 솟선 등 특성화 발전 추진 ○ (신형도시화) 농민 시민화, 도시인프라, “성중촌” 개발, 공평발전
⑦소비확대, 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확대) 소비기반 성장(세컨드카, 의료·양로·교육·문화·여행) ○ (투자 확대) 철도, 도로, 수리, 주요 인프라 투자 확대
⑧개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 협력) 국제대통로, 연선대통관, 국제생산, 서부내륙변경 개방 ○ (외국인 투자 확대) 서비스, 금융, 외투기업 설립 절차 개선 ○ (무역 고도화) 수출신용보험, 통관 단축, 서비스무역 개선, 신 무역업태, 가공무역 내륙 이전, 수입 확대(수입박람회 개최, 수입관세 인하) ○ (자유화·편리화) 자유무역 옹호(보호주의 반대), 지역무역협정 확대, 분쟁해결 개선
⑨민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창업) 직업 훈련, 인터넷 플러스 활용 취업, 차상위 빈곤층 지원, 성별·신분별 차별 제거 ○ (주민소득) 퇴직자 기본양로, 주민 기초양로, 최저임금 인상 등 ○ (교육) 의무교육 확대, 과외부담 경감, 인터넷교육 확대 등 ○ 기타 ‘건강중국’, 주택문제 해결, 구휼, 치안 개선 등

* 자료 : 리커창, 〈정부사업보고〉(2018.3.5)

2. 성장동력 발굴

1) 최근 성과 평가

- 공급측 개혁을 위해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발굴, 이를 위한 환경 마련에 노력하여 좋은 성과 이루고 있음을 강조

- (구조조정)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 * 추진하여 성과 획득 : 시멘트·판유리 등 낙후생산 도태에 기초해 철강 1.7억톤·석탄 8억톤, 3-4선 도시 주택 재고 대폭 축소, 공업 부채율 대폭 감축, 비용 지원 감축, 결핍 분야 지원 확대 등 달성
 - * 과잉생산설비 해소(去産能), 부동산 재고 해소(去庫存), 레버리지율 감소(去虹杆), 원가절감(降成本), 유효공급 확대(補短板) 등을 가리키며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제시한 이래 지속 강조

- (신성장 산업 육성) “인터넷 플러스(+)” 정책 진행하여 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물류네트웍등을 광범위하게 추진
 - “중국제조 2025” 실시하여 강력한 기초공업·스마트제조·녹색제조 등 중대공정 추진
 - 서비스업 개혁 추진하여 서비스분야 신업태 및 신모델을 진행하고 각 업종의 융합 업그레이드 추진
 - 농업 공급측 구조적 개혁 추진 양식농업의 규모경영 비중을 30%에서 40% 이상으로 확대
 - 중하위 소득자의 수입 확대에 노력하여 소비업 업그레이드·신흥 소비의 급속 증가 추진 ; 인터넷구매 연평균 30%이상 증가, 소비품판매액 11.3% 증가

- (투자구조 개선) 고속철도 운영 거리 9,000→25,000km 로 확대(전세계의 2/3), 고속도로, 농촌도로, 민간공항 등 대폭 확대

- (구조성 공급측 개혁) 정부 감독시스템, 감독 비용, 기업 부담등 감소
- (혁신기반 성장 추진) 사회적 창조력 촉발에 노력하여 혁신능력과 효율 현저하게 증가
- 다주체간 협동·전방위적 혁신 추진을 진행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연구 프로젝트 및 비용 관리 개선, 성과 권리 관리 방안 개혁 등 추진
- 베이징, 상하이등에 과학기술 혁신센터, 14개 국가급 자주혁신시범구 신설 등 추진.
- ‘대중창업, 만중혁신’ 적극 추진, 인큐베이팅 시스템 개선
 - 각종 시장주체 9800여만개에 이르러 5년간 70% 이상 증가
- 국내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 3배 증가, 기술교역량 2배 증가 등 도약식 과학기술 발전 달성

2) (2018년 계획) 신성장 분야 육성과 구조 조정

* 9대 정책과제 가운데 ① 과제에 해당

- (신성장 산업 육성) 신성장(신흥)산업 육성 및 전통산업의 첨단화와 스마트화 추진
 - (신흥산업) 빅데이터 발전 행동계획과 차세대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및 응용 ;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등 다분야에서 “인터넷 plus(+)” * 추진
 - 리커창 총리는 “인터넷 플러스” 에서 더 나가 “지능 플러스 (+)” *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전인대 폐막 기자회견(3/20))

* ‘지능 플러스(+)
(知能 (+), Intelligence plus) : 인터넷 플러스의 다음 단계로서 더욱 지능화된 기기·네트워크·상호작용에 의해 창조되는 지능화된 경제발전 모델 및 사회생태 시스템. 인터넷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내재한 생태-시스템으로 형성되는 고도의 정보 대칭·조화·작동되는 사회생태를 지칭

- (인프라·환경 개선) 인터넷 이용료 인하, 광대역 고속통신망 농촌지역 확대, 공공장소 무료이용네트워크 확대, 가정용·기업용 광대역 인터넷 사용료 인하, 모바일 인터넷 사용료 30% 인하 등
- (제조업 강화) 전자집적회로·5세대 이동통신·항공기용 엔진·신에너지자동차·신소재 등 산업의 발전 추진 ; 중대 부족 장비 전용공정, 공업 인터넷 플랫폼, ‘중국제조 2025’ 시범지역 설치
- (인프라·환경 개선) 공업생산 허가증 압력 대폭 감축 ; 국제 선진수준의 표준 추진

○ (구조 조정) 환경보호·품질·안전 등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과잉생산·낙후 및 도태 시설 해소

- 2018년 중 철강생산 3,000만 톤 전후 감축, 석탄 생산 1.5억 톤 퇴출, 표준에 미달하는 30만 천와트 이하 화력발전 장비 도태
- ‘좀비기업’ 파산 청산 및 구조조정 확대와 노동자 재배치·부채 처리

○ (기업부담 경감) 증치세(부가가치세) 개선, 제조업 및 교통운수 등 업종 세금 경감, 소규모 납세자 여난 세액 기준 인상, 세금 감면 대상 소득세 혜택 대상 중소기업 범위 대폭 확대, 물류기업의 창고용 용지세 혜택 범위 확대 등 추진

- 연간 기업 및 개인 감세 규모 8,000여 억 위안 달성

○ (비(非)조세 비용 경감) 행정사업성 비용 징수 감축, 일반 상공업 전력 가격 평균 10% 인하, 도로이용료 인하 등 추진

- 연간 시장 행위자 기준 비조세 부담금 3,000억 여 위안 감축

□ (혁신·개혁) R&D, 창업, 경제개혁 지속 추진

* 9대 정책과제 가운데 ②과제에 해당

- (R&D 강화) 기초연구 및 응용 기초연구 강화 ; 이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 중대 프로젝트 추진, 고표준의 국가 실험실 건설, 기업의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참가 장려 및 산관학 연계 프로젝트 강화, 과학기술 연구 성과의 응용 전환 확대, 미세먼지 관리·암(癌)등 중대 질병 예방치료 강화 추진
- (혁신 장려) 과정 중심 평가에서 결과 중심 평가로 전환, 혁신 주도 기구와 개인의 자산 지배권 및 기술개발 결정권 부여, R&D 담당자에 대한 보수 및 장려 개선 등 추진
- (창업 지원) “대중창업·만중창신(大衆創業·萬衆創新)” 수준 제고. 전방위 혁신 창업 서비스 제공
 - 이를 통해 ‘쌍창(双创)’ (혁신·창업) 시범기지 건설, 플랫폼 경제·공유경제 발전

□ (소비와 투자 통한 내수 확대) 주민 수요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소비를 확대하고, 투자 확대를 통해 공급구조 특화 - 총수요의 적정 확대간 선순환을 형성

- (소비 확대) 소비수요 고급화 및 유효 수요 충족을 위해 고급 및 서비스 소비 확대 추진
 - 소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비분야 신업태와 신모델을 발전
 -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시 세수혜택 정책을 3년간 추가 연장하고 세컨드카 제한정책을 전면 철폐

-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등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역량 지원
 - 전역여행시범구를 창출하고, 중점 국가급 풍경지역 입장료 가격 인하
 - 인터넷 구매·특송 배달의 건강한 발전 추진
 -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해 철저히 의법 처리
- (투자 확대) 적정 수준의 투자 확대를 통해 관련 수요 창출 및 인프라·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것으로 성장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철도 투자 7,320억 위안, 도로 수운 투자 1조 8천억 위안 전후, 수리(水利) 건설투자 규모 1조 위안 완성
 - 주요 인프라시설 건설 중서부지역에 집중 추진
 - 차세대 주요 기술개조 업그레이드 공정 추진
 - 중앙 예산내 투자 전년대비 300억 위안 늘어난 5,376억 위안 배정
 - 철도·항공·오일 및 가스·전신 등 분야 민간 투자 장려

3. 경제개혁

1) 최근 성과 평가

- (국유자산, 국유기업 개혁) 소유제 및 근본적 시장화 개혁 없는 부분 개혁 추진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자평
 - 공사제 개혁 기본 완성, M&A 추진. 국유기업 이윤 23.5% 증가. 에너지·철도·염업 등 개혁 심화. 비공유제 부문의 시장진입 확대, 재산권 보호제 개선. 재정세수체제 개혁(특히 공유제 위주의 중앙-지방 수입분배 구조 구축(즉 지방세인 영업세 폐지와 증치세 편입) 등 달성
- (기타 분야 개혁) 금융, 보험, 의료, 농촌제도 등 개혁 추진하되 급속한 개혁보다는 온건하고 점진적 개혁으로 기존 시스템의 개선에도모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예금성 보험제도 수립, 정책성·개발성 금융기구 개혁 등
 - 도농 의무교육 균형발전 추진
 - 도농 기본 양로·의료보험제도 수립
 - 의료·의료보험·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계 개혁
 - 농촌 토지 계약제도, 농산품 수매 및 저장 제도 개혁

2) 2018년 계획

- (경제개혁) 소유권, 금융, 재정·세수 분야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 보다는 보완과 개선에 치중
 - * 9대 과제 중 3번째 과제에 해당
- (국유자산·국유기업 개혁) 감독 권한 명료화, M&A 등 국유자산 감독 개선, 혼합소유제 추진 등 소유제 변화 보다는 개선에 중심을 둔 개혁 추진
- (민영기업 발전) 공유제 기업 민영화 보다는 권리 평등·기회 평등·규범 평등 등 비공유제 경제의 자발적 성장에 방점을 둔 민영기업 발전 방침 천명
- (재산권 제도·요소 시장화) 재산권 보호와 기술·토지 등 요소 가격의 시장화 개혁, 독점 규제 등 추진
- (재정·세수체제 개선) 중앙-지방간 업무 및 재정 분담 개선, 부동산세 입법, 개인소득세 개혁 등 추진
- (금융 개혁) 금융서비스 개선, 지방 중소기업기구 발전, 자본시장 개혁, 이자율 및 환율 안정적 시장화 추진
- (사회 개혁) 양로보험 관련하여 기업 직원 기본 양로보험 기금 중앙지원제도 건립하고, 공립 병원 종합 개혁과 관련하여 의료가격·인사 제도·의약품 유통·의료보험 지불 등 개혁 실시, 간병인 문제 해결 노력 등 추진
- (생태환경) 자연 생태공간 용도 관리 강화, 생태환경 위해 배상 제도 추진 등 추진

- (3대 공격전(攻堅戰)) 3가지 주요 과제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 집중관리하여 국정외 안정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특별 정책 과제
 - * 9대 과제중 4번째 과제로,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조치는 아니나 리스크 예방용 중점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개혁정책 소절에 포함

- (중대 리스크 예방) 금융 감독,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예방 및 관리 강화
 - 2018년 지방전용 채권 전년대비 5,500억 늘어난 1조 3,500만 위안 마련

- (빈곤 구제) 농촌 빈곤층 1천만 이상 축소, 빈곤지역 탈출 이전 280만명 추진. 빈곤지역 지원 확대 등

- (환경오염 예방) 푸른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성과 공고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오염 배출 기준 제고, 전국 범위의 생태보호 레드라인 기획, “외국산 고체 폐기물(洋垃圾)” 반입 금지 등

4. 지역개발 및 신형도시화

1) 최근 성과 평가

□ (지역개발) 균형발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지역과 성장벨트 성장 촉진

○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기존 추진해 오던 서부대개발·동북진흥·중부굴기 등에 더해 <13·5규획> 부터 추진해 온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공동발전·창장(長江)경제벨트 등 지역 특화형 개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 징진지 협동발전·창장경제벨트 발전 위해 관련 규획 작성하고 새로운 중점 프로젝트 추진
- 서부대개발·동북진흥·중부굴기·동부출선발전 관련 조치 추진
- 혁명근거지·소수민족지역·변경지역·빈곤지역 지원 강화
- 해양 보호 및 개발 순차적 추진

□ (신형도시화) 농촌(농민)의 도시화(도시민화)와 지역별 특성을 지닌 도시군(群) 육성 정책을 추진해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중점 도시군 계획 실시하여, 대-중-소 도시 및 소도시 협조발전 촉진
- 대부분 도시에서 호구 제한 완화, 거주증제도 실시,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도농발전 협조 증진

2) 2018년 계획

□ (지역협조발전) 지역별 비교우위와 잠재력을 개발하는 특성화 발전 전략의 지속 추진을 강조

* 9대 정책과제 중 6번째 과제

- (신형 지역발전 구도 창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 추진
 - 혁명근거지·소수민족지역·변경지역·빈곤지역 지원
 - 베이징의 비(非)수도기능 해소 목적의 징진지 협조발전 추진 및 공동 계획·높은 표준의 숭안(雄安)신구 건설
 - 생태 특화발전·녹색 발전을 목표로 한 창장경제벨트 발전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 발전계획을 통해 본토와 홍콩·마카오간 호혜 협력 강화
 - 신(新) 서부대개발 지도의견 제정, 동북 노(老)공업기지 진흥 추진, 중부지역 굴기 지속 추진, 동부지역 솔선 발전 지원 추진
 - 자원기반 지역의 경제구조 전환 촉진
 - 대(大)해양경제 육성하여 국가 해양 권익 보호

- (신형도시화 수준 제고) 인간 중심의 안정적인 도시화 추진 지속
 - 이농(離農) 인구 시민화(市民化) 추진하여 1,300만명 신규 도시 진입 달성
 - 공공교통, 농산품시장·주차장 등 편의 서비스 시설 개선
 - “도시속 농촌(城中村)”·노(老)주거지 개조 추진하고 에스칼레이터 등 관련 시설 개선
 - 하수도·종합 지하수로 네트워크 등 건설
 - 신형도시화 추진의 핵심은 사람임을 감안 세밀한 서비스·인성화 관리 강화

- (농촌진흥전략) 도농 융합발전 시스템 구축 및 새로운 농촌 발전 동력 마련
 - (농업 공급측 구조 개혁) 농업 혁신 및 특화 농업 발전 추진
 - 현대적 농업산업원(産業園) 및 지방 특화형 농산품 생산지역 육성을 가속화하고 식량 생산을 안정
 - 고표준 농경지 8,000만 무(畝, 약 30평(99.2㎡)) 이상 신규 확대 · 고효율의 관개 용수, 농지 절약 면적 2,000만 무 확대
 - 신형 농업 경영 조직 육성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한 사회화 서비스 강화
 - “인터넷+농업” 발전시켜 다양한 농민수입 확대 통로 마련하고 농촌내 1-2-3차 산업의 융합발전 촉진
 - (농촌개혁 심화) 농지 권한 관련 제도 정비와 안정화 추진
 - 제2차 토지사용 계약 완료후 재연장기간 30년 정책 추진
 - 택지 기본 소유권 · 자격권 · 사용권 분리 개혁 모색
 - 농경지 지표 기준 · 도농 건설용지 증감 연계 지표 구축 등 통해 빈곤구제 자금 확보
 - 식량 수매 및 저장 · 집체 재산권 · 집체 임업권 · 국유림 · 농지개량 · 농촌 공소사 등 개혁 추진
 - (각종 농촌사업 추진) 농촌지역 인프라 및 환경 개선 추진
 - 물공급 · 전기공급 · 정보 등 기초 인프라 개선
 - 농촌도로 20만 km 신규 건설
 - 농촌 주민 환경정돈 3년 행동계획 추진하여 “화장실혁명” 달성
 - 농촌 풍속 변화(移風易俗) 촉진
 - 자치 · 법치 · 덕치 결합한 농촌 거버넌스 체계 달성
 -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농촌진흥을 추진하여 농업 및 농업의 현대화를 가속화

5. 대외경제

1) 최근 성과 평가

- (총평) 신국제경제질서(일대일로) 추진, 개방 확대, 자유화 추진 성과 긍정 평가 및 지속 추진 방침 확인
- (일대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실크로드 기금, 상호 연계 및 무역 협력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 상하이 등 11개 설립하여 시범 성과 획득
- (국제전자상거래 시험구) 13개 설립
- (투자 개방) 외국인투자 심사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전환 및 투자제한 대폭 축소(제한류 대상 업종 2/3 축소)
- (외국인 투자 개선) 고기술산업 비중 2배 증가
- (국제 생산협력) 고속철도·핵발전등 장비 세계 진출
- (통상) 8개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후속협상) 및 신규 협상 시작
- (위안화 국제화) 인민폐의 IMF 특별 인출권 화폐 포함 등 인민폐 국제화 중요한 진전 달성

2) 2018년 계획

- (일대일로 국제협력)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대외 협력 및 진출 강화 지속
- (일대일로 포럼) 일대일로 고위급 포럼*의 성과 이행
 - * 2017년 5월 베이징 개최, 2019년 2차 포럼 예정
- (통관 협력) 국제 대통로(大通道) 건설 추진하여 연선지역 통관(大通關) 협력 심화
- (생산 협력) 국제 생산 협력 확대하여 중국 제조 제품과 중국산 서비스의 해외진출 촉진
- (저우추취(走出去)) 대외 투자구조 특화(特化)
 - 민감분야(무기개발, 국경간 수자원 개발, 언론매체 등)와 2017년 제정한 단순 오락 및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해외투자 제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외투자민감업종리스트(2018년판)>(2018년 1월 발표, 3월 1일 시행)
 - * 부동산, 호텔,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구체적인 해외 사업프로젝트가 없는 주식투자 펀드 혹은 투자플랫폼
- (내륙 개방) 서부·내륙·변경지역 개방 수준 높여 경제협력의 신공간 확대
- (투자 개방) 투자개방 확대, 절차 간소화, 내국민대우 확대 지속 추진
- (규범) 국제 수준의 무역 규범과 연계(對接) 강화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영환경 구축

- (개방 확대) 일반 제조업 전면 개방, 통신(電信)·의료·교육·양로·신에너지자동차 개방 확대
- (금융 개방) 각종 금융 개방 확대
 - 은행카드 청산등 시장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외자보험 經紀 공사 경영범위 확대
 - 은행·증권·기금관리·선물(期貨)·금융자산관리공사 등 분야 외국인 지분 제한 범위 줄이거나 철폐
 - 중국-외자 은행 시장진입 표준 통일
 -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내 이윤 재투자에 대한 납세 연기
 - 외자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 (무역의 안정적 호전 유지) 무역 편리화, 서비스무역 확대, 수출품의 질 제고, 수입 확대 중점 추진
- (리스크 관리) 수출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통관 편리화) 전체 통관시간을 1/3 압축
- (서비스무역) 발전 메카니즘 개혁
- (신무역) 무역의 신업태(新業態) 및 신모델 육성
- (가공무역) 중서부 점차적 이전 추진
- (수입 확대) 수입 확대를 위해 제1차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를 잘 추진하고 자동차·일부 생활소비제품등의 수입관세를 인하
 - * 'IMPORT EXPO', 11월 5~10일 상하이 개최 예정

- 시장 개방 더욱 확대하여 산업 업그레이드와 무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

※ (개방 확대 확인)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4월 10일)에서 시진핑 주석은 개방 확대 방침을 재확인

- 이 조치는 중국의 ‘불공정행위’ (미 통상법 301조)를 빌미로 한 통상 보복에 대한 유화 제스처이기도 하나 개방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제질서 주도 의지 재확인이라 할 수 있음(상세 내용 아래쪽 [참고] 참조)

□ (통상정책) 세계화, 자유무역, 적극적 통상정책 지속 추진

- (자유무역 추진) 경제의 글로벌라이제이션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자유무역 보호
- (자유화 협상) 관련국가와 다자 무역협상 진행,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협상 조기 타결 추진, 아태자유무역지대(APFTA)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가속화
- (개방 정책 지속) 평등한 협상 통한 무역분쟁 해결, 무역보호주의 반대, 견결한 자국의 합법적 권익 보위를 강조

[참고]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 나타난 개방 확대 조치

* 시진핑, “개방으로 번영 공동 창조, 혁신이 이끄는 미래”, 보아오 아시아포럼 2018년 연회 개막식상 주최 연설(4.10일)

① 시장진입 대폭 확대

- 올해 서비스 특히 금융분야에서 2017년 말 선언한 은행·증권·보험업 외자지분 제한 완화 조치 실시
 - 이와 함께 보험 개방 확대·외자 금융기구 설립 제한 완화, 외자 금융기구의 중국내 업무범위 확대, 중외 금융시장 협력 분야 확대 등 실시
- 제조업 분야에서 개방이 제한된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소수 분야의 개방 확대 준비를 마친 상태
 - 다음 단계로 외자 지분제한, 특히 자동차 업종의 외자 제한 완화 신속 실시

② (투자 환경) 더욱 흡인력 있는 투자환경 창조

- 과거 외상투자에 대해 특혜정책을 운용했으나 지금은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중
 - 예를 들어 국제규범과 연계성·투명성·재산권 보호·법치·경쟁 및 반독점에 노력중
 - 올해 3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의 기구를 신설
- 올해 상반기 내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수정작업을 완료하여 설립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임

③ 지재권 보호 강화

- 올해 내 국가지식재산권국(局) 재편하여 법집행 역량 개선 및 확대
- 중국은 중외기업의 정상적인 기술교류협력을 장려하며, 중국내 외자기업 합법적 지재권을 보할 것임
- 이와 동시에 외국정부의 중국 지재권 보호를 희망

④ 능동적 수입 확대

- 올해 내 자동차 수입관세 대폭 및 일부 기타 품목의 수입관세 인하
-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가속화
- 올해 11월 제1차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예정
- 선진국의 정상적·합리적 고기술 제품 무역 제한 중지 완화 희망

Ⅲ. 기회와 활용 방안

1. 2018년 주목해야 할 7대 시장 변화

□ 최근 중국의 산업 및 시장 변화와 양회에서 발표된 정책을 감안할때 대략 7개 분야가 중국의 시장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

① (신성장 산업) 인터넷(모바일)에 기반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를 활용한 업종

- (방향) 차세대 먹거리 구축 목적에 따라 지속 육성 및 강화 중
- (정책 조치) 주요 정책 조치는 신홍산업 육성, 인터넷 (+), 인프라 확대, 접근성 강화* 등

* 통신망 확대, 이용료 인하 등

- (업종/품목) 빅데이터, 차세대 인공지능(AI)가 1차적인 대상이나, 넓게는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등 인터넷 플러스(+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종도 포함

② (스마트 제조*) 제조업 기술 혁신 및 네트워킹 강화

* 신성장 산업과 일부 중복되나 신성장 산업이 새로운 업종을 주로 가리키는 반면 스마트 제조는 기존 산업의 첨단화, 기술개조를 가리킴

○ (방향) ‘스마트 제조’ (즉 “중국제조 2025”) 지속 추진

○ (정책) 산업육성, 인프라·환경 개선*, 시범지역 설치

* 허가증 완화, 국제 표준 추진 등

○ (업종/품목) 집적회로·5세대 이동통신·항공기 엔진·신에너지자동차·신소재 등 ; 중요 부족 장비 전용공정, 공업용 인터넷 플랫폼 등

③ (현대적 서비스업) 산업화 진전과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서비스산업 확대와 고도화 가속

- (방향) 서비스 중심 경제* 지속 추진
* 서비스 첨단화, 서비스 산업 비중 확대
- (정책) 서비스산업 육성, 서비스 개방 확대, 시범사업* 추진
* 서비스무역 개방혁신 시범사업 지속 추진
- (업종/품목) 전문서비스*, 혁신형 생활서비스**
* 전문적 기술과 훈련에 기반한 서비스 : 법률, 회계, 세무,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
** 인터넷·빅데이터·AI 등에 기반한 생활서비스(교육, 환경, 관광, 의료, 레크리에이션·문화·체육, 양로 등)

④ (창업) 시진핑 시대 중국의 성장 및 일자리 촉진 전략으로 성과를 바탕으로 노력 강화 예상

- (방향) 창업은 올해 중국의 9대 정책과제 중 2번째인 ‘혁신경제’의 핵심과제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
* ‘대중창업·만중혁신’(大衆創業·萬衆創新)
- (정책) “쌍창(雙創)”(창업·혁신) 시범기지 건설, 플랫폼경제·공유경제 플랫폼 육성, 자금 지원
* 국가 융자담보기금, 우수 혁신기업 상장 지원, 창투·엔젤투자 세수혜택 확대, 인력 지원 등
- (업종/품목) 모든 혁신형 창업(차세대 기술(인터넷·빅데이터·AI 등 네트워크 기반 창업)
* 예) 중국의 ‘신4대 발명품’(고속철도망·모바일결제·공유경제·전자상거래),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⑤ (소비 확대) 소득 수준 제고와 정부의 내수 확대 정책에 따라 확대 및 고도화 지속

- (방향) 18년에도 소비는 내수확대와 성장을 제고의 버팀목
- (정책) 자금 지원, 인프라 확대, 개방 확대 등
 - 신에너지차 세수혜택, 세컨드카 제한 철폐, 입장료 인하 등
 - 전자상거래, 속달 지원등 소비인프라 개선
 - 수입관세 인하, ‘상하이 수입 EXPO’ (11월) 개최 등
- (업종/품목) 고급소비재((신에너지)자동차, 가정용품, 식품 등), 생활서비스(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여행 등)

⑥ (투자 확대) 성장을 유지와 사회경제적 업그레이드를 위해 적정 투자 확대 지속 예상

- (방향) 소비와 함께 성장 및 업그레이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정책) 정부주도 투자 확대, 투자개방 확대
 - (프로젝트·예산) 철도 7,320억 위안, 도로·수운(水運) 1조 8천억 위안 전후, 수리(水利) 건설 1조 위안 완성 ; 주요 인프라시설 건설 중서부 지역에 집중 추진 ; 차세대 기술개조 업그레이드 공정 추진 ; 중앙예산내 투자 전년비 300억 위안 증가한 5,376억 위안 배정 ; 철도·항공·오일 및 가스·전신 민간 투자 장려 등
 - 투자 개방 확대 및 규범 수준 제고
- (업종/품목) 일반 제조업, 철도, 도로, 수운(수운), 수리, 가스, 전신, 의료, 교육, 양로 등

⑦ (지역특화형 도시권 부상)

- (방향) 13.5 계획(2016~20년) 들어 지역개발정책이 ‘지역특화형’ 으로 전환, 실시
 - * 과거 동-중-서 혹은 서부개발·동북진흥·중부굴기 등 정형화된 방식과 달리 수도권(징진지) 협조발전, 장강경제벨트, 지역 특색을 띤 도시군 육성 등 지역별 발전여건을 반영한 지역개발 전략 추진
- (정책)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 전략 추진
 - 베이징의 비(非)수도기능 해소 목적의 징진지 협조발전 추진 및 공동 계획·높은 표준의 숭안(雄安)신구 건설
 - 생태 특화발전·녹색 발전을 목표로 한 창장경제벨트 추진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 발전계획을 통해 본토와 홍콩·마카오간 호혜 협력 강화
 - 신(新) 서부대개발 지도의견, 신동북노(老)공업기지 진흥 등
 - 대(大)해양경제 육성하여 국가 해양 권익 보호
 - 지역 특성을 지닌 신형도시화 및 도시군 육성 등
- (업종/품목) 건축, 건설, 교통인프라, 도시인프라(시장, 주차장·하수도·환경설비 등), 지역특화형 관광

<2018년 주목되는 중국의 7대 시장 변화(요약)>

7대 시장 변화	내 용
<p>① 신성장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차세대 먹거리 육성 지속 및 강화 ○ (정책) 신흥산업 육성, 인터넷 (+), 인프라 확대, 접근성 강화* * 통신망 확대, 이용료 인하 등 ○ (업종/품목) 빅데이터, 차세대 인공지능(AI) 육성 ;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등 인터넷 활용(+) 추진
<p>② 스마트 제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스마트 제조’ (즉 “중국제조 2025”) 지속 추진 ○ (정책) 산업육성, 인프라·환경 개선*, 시범지역 설치 * 허가증 완화, 국제 표준 추진 등 ○ (업종/품목) 집적회로·5세대 이동통신·항공기 엔진·신에너지 자동차·신소재 등 ; 중요 부족 장비 전용공정, 공업용 인터넷 플랫폼 등
<p>③ 현대적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서비스 중심 경제* 지속 추진 * 서비스 첨단화, 서비스 산업 비중 확대 ○ (정책) 서비스산업 육성, 서비스 개방 확대, 시범사업* 추진 * 서비스무역 개방혁신 시범사업 지속 추진 ○ (업종/품목) 전문서비스, 혁신형 생활서비스 * 전문적 기술과 훈련에 기반한 서비스 : 법률, 회계, 세무,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 * 인터넷·빅데이터·AI 등에 기반한 생활서비스(교육, 환경, 관광, 의료, 레크리에이션·문화·체육, 양로 등)
<p>④ 창업, 창업붐은 계속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창업은 올해 중국의 9대 정책과제 중 2번째인 ‘혁신경제’의 핵심과제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 * ‘대중창업·만중혁신’(大衆創業·萬衆創新) ○ (정책) “쌍창”(창업·혁신) 시범기지 건설, 플랫폼경제·공유경제 플랫폼 육성, 자금 지원 * 국가 융자담보기금, 우수 혁신기업 상장 지원, 창투·엔젤투자 세수 혜택 확대, 인력 지원 등 ○ (업종/품목) 모든 혁신형 창업(차세대 기술(인터넷·빅데이터·AI 등 네트워크 기반 창업) * 예) 중국의 ‘신4대 발명품’(고속철도망·모바일결제·공유경제·전자상거래),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p>⑤ 소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18년에도 소비는 내수확대와 성장을 제고의 버팀목 ○ (정책) 자금 지원, 인프라 확대, 개방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에너지차 세수혜택, 세컨드카 제한 철폐, 입장료 인하 등 - 전자상거래, 속달 지원등 소비인프라 개선 - (수입확대) 수입관세 인하, ‘상하이 수입 EXPO’ (11월) 개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품목) 고급소비재((신에너지)자동차, 가정용품, 식품 등), 생활서비스(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여행 등)
<p style="text-align: center;">⑥ 투자, 많아지고 넓어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소비와 함께 성장 및 업그레이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정책) 정부주도 투자 확대, 투자개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7,320억 위안, 도로·수운 1조 8천억 위안 전후, 수리(水利) 건설 1조 위안 완성 ; 주요 인프라시설 건설 중서부지역에 집중 추진 ; 차세대 주요 기술개조 업그레이드 공정 추진 ; 중앙예산내 투자 전년비 300억 위안 증가한 5,376억 위안 배정 ; 철도·항공·오일 및 가스·전신 민간 투자 장려 등 - 투자 개방 확대 및 규범 수준 제고 ○ (업종/품목) 일반 제조업, 철도, 도로, 수운(수운), 수리, 가스, 전신, 의료, 교육, 양로 등
<p style="text-align: center;">⑦ 지역 특화형 도시권 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13.5 계획(2016~20년) 들어 지역개발정책이 ‘지역특화형’으로 전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동-중-서 혹은 서부개발·동북진흥·중부굴기 등 정형화된 방식과 달리 수도권(징진지) 협조발전, 장강경제벨트, 지역 특색을 띤 도시군 육성 등 지역별 발전여건을 반영한 지역개발 전략 추진 ○ (정책)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 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의 비(非)수도기능 해소 목적의 징진지 협조발전 추진 및 공동 계획·높은 표준의 숭안(雄安)신구 건설 - 생태 특화발전·녹색 발전을 목표로 한 창장경제벨트 추진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 발전계획을 통해 본토와 홍콩·마카오간 호혜 협력 강화 - 신(新) 서부대개발 지도의견, 신동북노(老)공업기지 진흥 등 - 대(大)해양경제 육성하여 국가 해양 권익 보호 - 지역 특성을 지닌 신형도시화 및 도시군 육성 등 ○ (업종/품목) 건축, 건설, 교통인프라, 도시인프라(시장, 주차장·하수도·환경설비 등), 지역특화형 관광,

2. 한중 현안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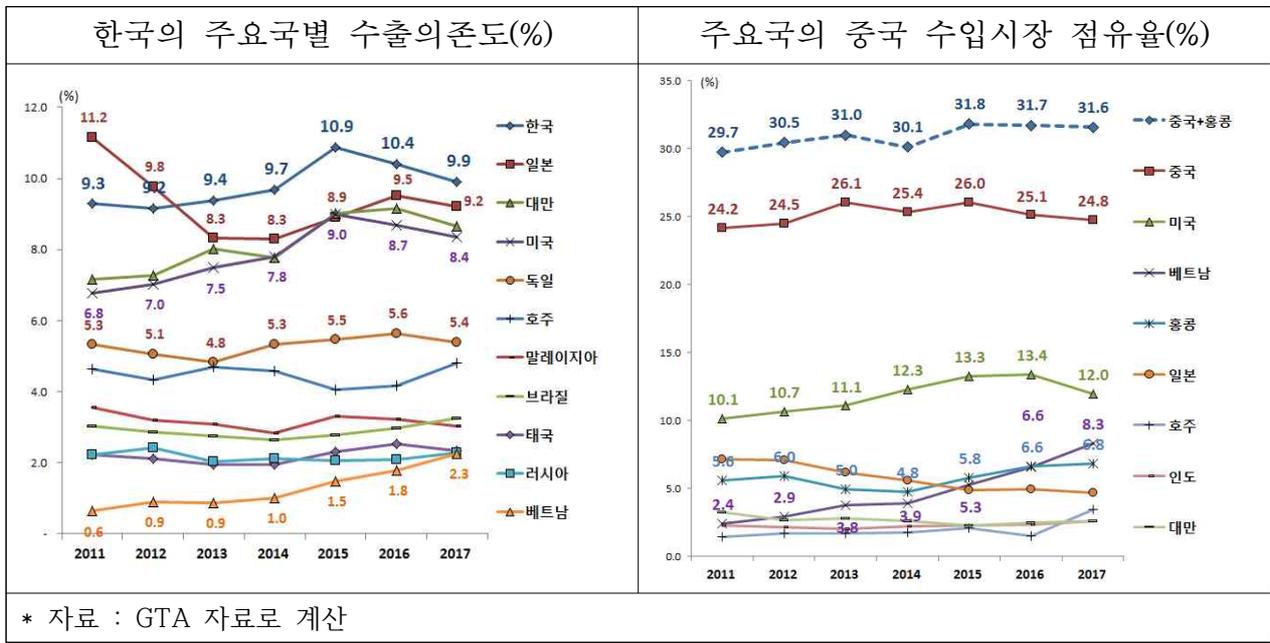
- (한중 교역 평가) 중국 성장의 둔화와 사드 문제에 따른 한중관계의 ‘냉각’에도 불구하고 한중 교류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대중 수출이 2016년 9.3%나 감소하기도 했으나 사드사태 와중에서도 2017년 14.2% 늘어난 1,421억 달러를 기록하여 성장세로 전환(상세 내용 아래 자료 참고)
- 앞으로 대중 경제관계도 지나친 비관에 빠지지 말고 중국의 산업·시장·정책의 변화를 관찰해 가면서 한중간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와 방법을 발굴해 나가는 일이 중요

[참고] 한중 무역, 우려 속에서도 꾸준한 성과 지속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한국은 5년째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국 자리 유지중
- 수입시장 점유율 2015년 10.9%에서 2017년 9.9% 떨어졌으나 점유율 하락은 상위 5대 수출국(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공통의 현상으로 이 와중에서도 한국은 1위국 자리 유지
 - 상위 5대 수출국의 수입점유율 하락 이유는 중국의 성장 지속에 따른 對 자원국(브라질, 호주, 러시아 등) 수입 확대와 밸류체인(GVC)의 동남아 확산에 따른 태국, 베트남 등지로부터의 수입 확대
-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급락 가능성은 적음
- (한국의 대중수출 의존도) 대중 수출의존도가 2015년 26.0%에서 2017년 24.8%까지 떨어지는 등 대중수출 비중 감소가 두드러짐
- 대중수출 의존도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IT·전자업체들의 생산거점

베트남 이전으로 수출 다원화에 따른 리스크 감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또 하나 주목되는 현상은 대중수출 의존도는 떨어져도 중화권(중국+홍콩) 수출 의존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 중국 수출의존도는 2015년 26.0%에서 2017년 24.8%로 떨어졌으나 중화권 수출의존도는 같은 기간 31.8%와 31.6%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전자 부품이 홍콩을 경유*해 중국 화남지역(광둥성지역)으로 향하는 수출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으로 우리의 對중화권 수출의존도는 31~32%선에서 유지되고 있음
 - * 우리의 대홍콩 수출중 70~80%가 홍콩 경유 중국행 수출품임



□ (사드 보복) 글로벌 경제 규범 강조, 대(對) 주변국 우호협력 강화 등 이번 양회에서 밝힌 대외경제정책 방향으로 보아 사드 보복 완화·해소 가능성이 큼

○ 리커창 총리는 <정부사업보고> 말미에서 대외개방 확대와 글로벌 경제 규범 준수·강화*, 더 나가 주변국가와 우호 및 공동발전 추진 의지를 강조

* 무역·투자 개방, 무역 고도화 및 편리화, 보호주의 반대, 분쟁해결 개선 등

- 양회 폐막 직후 방한한 양제츠(楊潔篪) 당중앙 정치국 위원 겸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보복 종료 의지를 표명

* “▲단체 관광 정상화,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 절차 진행,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 중국은 문 대통령의 관심 사항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관련사항은 빠른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될 것, ...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조선일보, 중앙일보, 3월 31일자)

- 양회에 나타난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이후 한국 관련 태도로 보아 사드 등 경제외적 쟁점이 한중 교류에 미칠 영향은 줄어들 전망

□ (정책 협조) 일대일로(중),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한) 등 양국의 주요 정책 과제간 협조와 협력 공간 확대 예상

-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일대일로 전략 강화*을 재확인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북방 및 신남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과 접점이 커졌음

*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2017년 5월 개최) 후속 조치, 국제 대통로(大通道) 건설 및 연선지역 대통관(大通關) 협력 심화, 국제 생산협력 통한 중국제조업과 중국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확대, 대외투자 구조 최적화(월화), 서부·내륙·변경지역 개방 확대 통한 경제협력 신공간 확대(정부사업보고)

- (고위급 회담 선정 협력과제) 2월 2일 1년 9개월 만에 열린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에서 각종 정책 협력 추진기로 약속 주요 약속 사항은,

* 2018년 2월 2일 기획재정부 장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베이징

- (정책협조)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협력
- (제3국 동반진출) 중점사업 리스트 작성, 성공사례 발굴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 노력

- (거시경제 협력) 양국 간 정책 대화와 협력 지속 강화
- (기업·투자 협력) 상호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
 - *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 단체관광 재개 등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중국측에 요청
- (관광·기술) 관광교류 활성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 (지방협력) 동북3성·지방협력
 - * 지자체-지방정부 협력, 동북3성내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선정·협력 추진(중국측 제안),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와 한국간 협력방안 모색 등
-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 및 상호투자 확대 협력 강화 등임

□ (통상 협상) 중국의 개방 및 자유화 확대 의지 재확인에 따라 양국간 통상 협상도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

○ 한중관계 회복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당초 예정대로* 시작(3월 22일)

- * 한중 FTA 타결시 FTA 발효(2015.12.20) 2년내 서비스·투자협상 개시 및 협상 개시후 2년내 타결기로 약속했으며, 발효 2년을 앞둔 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2017년 12월)시 협상 개시 약속
- * 2016년 7월 이후 사드 갈등으로 동 후속협상 개시 여부가 우려의 대상이던 상황에서 3월 협상 개시는 한중관계 회복의 일단을 반영

○ 다자 무역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등 양국이 참여하는 통상협상 역시 실질적인 성과와 별도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3. 중국 진출 및 한중 협력 방안

- (시장 진출) 중국 경제(산업, 시장)의 최근 성과와 정책 방향으로 보아 중국 시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중국 시장 진출과 활용 전략 모색

- (산업) 중국의 산업이 스마트 제조 및 신성장 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산업을 우리의 신시장으로 삼아 적극적인 진출 전략 모색, 추진
 - 신산업 성장에 필요한 부품·소재*, 소프트웨어 개발
 - * 예)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고부가가치 (석유) 화학제품 등

- (시장) 신산업의 전방 시장*은 물론 고품질 소비재**, 서비스 더 나아가 창업시장***을 겨냥한 업종 및 제품 개발과 진출
 - * 신산업 생산에 공급되는 부품, 소재
 - ** 화장품, 소형가전, 생활·취미용품, 식품 등 한국 제조 및 한국 개발 제품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고품질 생활 및 취미용품
 - *** 중국 정부는 ‘인터넷 플러스(+)' 기반 플랫폼, 공유경제에서 더 나가 ‘지능 플러스(+)' (intelligence plus) ’ 중심의 창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리 기업에도 큰 시장이 될 수 있음

- (한중 협력) 양국의 정책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 (정책 협력) 일대일로 - 신북방협력·신남방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양국 핵심 정책의 접점을 찾아 협력 방식과 대상을 발굴, 추진
 - 미세먼지 등 양국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발굴 및 협력 방안도 적극 마련

- (분야별 협력) 산업, 이슈, 지방간 협력 강화와 모델 발굴
 - (산업) 4차산업(‘신성장산업’), ‘스마트 제조’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기술개발, 창업등 산업협력 모색, 추진
 - (분야(이슈)) 비관세장벽(통관 · 인증 · 표준 등), 중소기업, 금융 등 중요 이슈 관련 협력 강화
 - (지방협력) 양국 교류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심화 단계로 전환되면서 협력 사안이 다양해지고, 황해연안 · 동북 접경지역 등 공간적 대면 지역이 넓음을 감안, 지방 협력 더욱 확대 및 세분화 필요
 - * 기존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인천-웨이하이), 한중 산업단지(새만금, 엔타이-엔칭-후이저우)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동북지역 등 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

- (통상 협상) 한중 FTA 이행 및 후속협상, 기타 통상 협상에서 공조 강화

작성자

◆ 동북아사업단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

KOCHI자료 18-003

양회에 나타난 중국의 2018년
경제정책과 시사점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8년 4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의처 | 동북아사업단
(02-3460-7412)

ISBN : 979-11-6097-707-3 (95320)



CHINA

양회에 나타난 중국의
2018년 경제정책과
시사점

